

광주시민 93% “생활쓰레기 발생으로 환경문제 심각”

신규 소각장 설치 61.4%가 동의 ESG평가 세종시 이어 광주 2위 재활용 폐기물 가장 많이 배출

| 자치구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
|--------------------|------------|
| ·동구 0.7kg | ·서구 0.89kg |
| ·남구 0.58kg | ·북구 0.84kg |
| ·광산구 0.66kg | |

올해 11월, 광주시의회가 주도해 실시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민 93%가 생활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광주시에 신규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 61.4%가 동의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7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ESG평가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시는 A등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으로 2위라는 높은 등급을 받았다. ESG 등급은 E=환경부문/S=사회부문/G=지배구조, 행정부문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시는 환경부문 E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폐기물 관리 그리고 친환경 생활의 다양한 부분을 평가해 등급을 주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까지 완벽히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불러오기까지는 광주시민의 환경 개선 노력 인식이 껴있었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5개 구는 공회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광산구는 거주인구 41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0.66kg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광역위생 매립장으로 보내진다. 광산구는 동

별 쓰레기 발생현황을 알 수 없는 타 자치구와 동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광산구 관내 가장 많은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지역은 역시 광산구 인구의 20%인 8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인 수완동이었다. 수완동은 1일 평균 약 53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한다.

서구는 인구수를 30만 명으로 볼 때, 하루 1인당 약 0.89kg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었다. 서구의 생활폐기물은 수거되어 모두 항동 매립장에서 처리된다.

남구의 거주인구 21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0.58kg이 배출되고 있다. 남구의 종량제 봉투 즉, 생활폐기물은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이동되어 처리된다. 특히 남구청 폐기물 관리담당자에 따르면 “남구에서 생활쓰레기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자원”이라고 했다.

동구의 인구 10만 명으로 나누었을 때, 1인당 배출량이 0.7kg. 구의 생활폐기물도 광역위생 매립장으로 이동하여 매립된다.

북구의 인구 43만 명으로 나누면 1일 1인당 약 0.84kg의 쓰레기를 배출했다. 북구청 생활폐기물 담당자는 “북구가 타구보다 거주인구가 많아 쓰레기 발생률도 높아 생활폐기물도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구의 생활폐기물도 광역위생 매립장에서 처리된다.



광주 남구 양곡동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에서 광주지역 자치구로부터 배출된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모든 구의 폐기물은 매립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 처리 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로는 음식물 쓰레기로 광주광역시 공공 자원화 시설로 이동되어 퇴비와 사료로 다시 재활용되거나 관내 에너지원으로도 생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탄소포인트 가입률이 1위인 곳이다. 광주시의 탄소중립 목표는 국가 목표인 2050년보다 5년이 빠른 2045년으로 지난해 9월 '광주형 AI-그린뉴딜 선포식'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도시 목표를 발표했다.

목표는 '시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도시 내 그린에너지 생산 소비 공급체계 확립' 등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은서 학생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은 선택 아닌 필수”

정부 온실가스 2030년까지 40% 감축·2050년 '배출 제로' 목표 “과도한 목표” 재계 반발에도 “미래경쟁력 위해 반드시 필요” 의지

정부는 10월 31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안건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을 두고 과도한 목표, 방법의 모호성, 경제적 타격, 합의 부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총리는 16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보낸 축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언급하며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11월 6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제조업 위

주의 산업과 높은 화석연료 비중을 가진 대한민국은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가 상승하며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 위기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

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한편 기상청이 6월 발표한 '동아시아 지역 미래 극한기후 변화분석 결과'에 따르면 1.5℃ 기온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는 2028-2034년이며, 2.0℃의 기온 상승은 2041-2053년에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1.5℃의 기온 상승 시기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IPCC, 2018)'에 보고된 것(2030-2052년)보다 다소 빨리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온난화에 대한 적응·완화 정책의 전면적 이행이 매우 시급함을 암시한다”고 밝히며 2050년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혁승 학생기자

